eISSN 3140-409X

ISSUE BRIEF

이슈브리프 915호
(2026.11.18)

美 중간선거 이후 미국과 한미동맹: 도전과 과제

제915호

하경석 haks@inss.re.kr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임기 후반 대외전략을 추진할 정치적 여건이 변화하였다. 본고는 분점정부의 출범과 민주·공화 양당의 2028년 대선 경쟁이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미동맹, 지역 질서에 미칠 도전과 과제를 분석한다. 의회의 예산, 입법, 인준을 통한 견제는 확대되지만, 대통령의 대외정책 재량과 미국 우선주의의 정치적 기반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외교와 분쟁 해결을 통한 정치적 성과를 추구하는 한편, 의회와의 갈등으로 합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적 동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양당 모두 대외정책의 국내정치적 성과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동맹국에 대한 방위 책임과 산업적 기여 요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동맹의 제도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면서도 책임 분담과 지역적 역할 조정을 둘러싼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대중국 억제와 선택적 타협, 강대국 중심 정상외교가 병행되는 가운데 한국은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고 한반도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관여를 확대해야 한다. 북미대화에서도 비핵화 목표와 확장억제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위협 감소가 함께 진전되도록 협상 목표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 생존 기반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산업 및 기술 역량을 동맹의 공동이익과 연결해야 한다. 이를 지역 협력과 국내적 합의로 뒷받침함으로써 미국 정치의 격랑 속에서도 국익에 기초한 외교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미국 중간선거, 분점정부, 트럼프 2기, 한미동맹, 국가안보전략

2026년 11월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하였다. 미국 현지시간 11월 17일 개표상황 기준 민주당은 하원에서 최소 256석을, 상원에서는 민주당 쪽으로 분류되는 무소속을 포함해 최소 55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1]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인 동시에, 임기 후반 미국의 대외전략과 동맹정책을 추진할 정치적 여건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미국 내 권력 구조의 변화가 한미동맹의 안정성, 동맹국에 대한 책임 분담 요구, 지역 질서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정치지형의 재편과 분점정부 구성

이번 선거 결과로 우선 주목해야 하는 점은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명확히 나누어진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트럼프 1기 2018년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유지했던 것과 달리, 2027년 1월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예산과 입법, 주요 공직자 인준 등 상·하원의 권한을 주도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상원의 의사절차를 고려하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확보한 우위를 곧바로 행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2] 따라서 향후 분점정부의 작동 방식은 백악관과 의회가 어떠한 사안에서 충돌하고, 어느 범위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화당의 정치적 대응에서도 주목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원에서는 친 트럼프 성향의 짐 조던(Jim Jordan)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었고, 상원에서는 제도적 절차를 비교적 중시하는 존 튠(Jone Thune)이

1) *AP*, "2026 election results" (17 Nov, 2026).
2) 의회가 대통령의 비토(veto)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전원 출석 기준, 하원 290명, 상원 67명 필요) Elizabeth Rybicki, "Veto Override Procedure in the House and Senate," CRS Report, RS22654 (5 Jan 2026).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 속에서도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서 더욱 강력한 국내정책 드라이브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구에서 당선된 하원 의원들의 비중을 고려하면, 당 지도부는 핵심 지지층의 요구에 계속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2028년을 준비하는 공화당 주자들도 중도 유권자의 지지를 회복하면서 트럼프 지지층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3] 이에 미국 우선주의와 산업 보호 기조가 향후 공화당의 대외정책 논의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거 승리의 의미와 향후 노선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되었다. 11월 13일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 상원의원이 척 슈머(Chuck Schumer)의 원내 지도부에 도전한 것은 압승 이후에도 당내 합의가 유동적임을 보여준다.[4] 밴 홀런이 상징하는 민주당 내 진보·개혁파와 슈머의 온건 노선은 대 행정부 견제의 강도, 민생 입법의 우선순위,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에서 서로 다른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유력 주지사와 연방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차기 대선 경쟁도 이러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당의 동맹 및 국제제도에 대한 지지 역시 노동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해외 개입의 비용에 관한 당내 요구와 함께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민주당 내 경쟁적 세력들이 동맹의 어떠한 기능을 중시하고, 개별 협력의 범위와 조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 재편의 공통 배경에는 대외정책이 미국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 AP 유권자 조사에서 생활비 물가상승(inflation)과 정부 부패(curruption)가

3) AP, “Republicans acknowledge voters rejected them but show little appetite for breaking with Trump” (13 Nov 2026).
4) CNN, “Chris Van Holen launches challenge against Chuck Schumer to lead Senate Democtrats,” (13 Nov 2026).

공화당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도 물가와 의료비, 이란전쟁을 중간선거 의제로 공략하였다.[5] 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관세의 소비자 전가는 국제적 관여의 국내적 정당성 확보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미국에게 동맹의 가치는 안보 공약과 함께 고용, 생산능력, 재정 부담의 관점에서도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 대한 방위 책임과 대미 투자 요구도 이러한 정치적 여건 속에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상외교의 동력과 대외정책 이행의 제약

임기 후반의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의 갈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외교적 성과를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6] 정상회담과 분쟁 해결은 임기 후반 대통령이 정치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분야이다. 다만 의회의 조사와 인준 갈등은 행정부의 역량을 소모하고, 장기 합의에 필요한 예산과 입법의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정상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속도와 미국 내에서 이를 뒷받침할 정치적 동의가 형성되는 속도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국도 합의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협상을 늦추거나 미국의 선행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트럼프의 타협 의지와 협상 상대에 대한 압박이 함께 강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 이란 전쟁은 이러한 제약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종전을 요구하는 여론과 민주당의 견제는 행정부가 전쟁의 목표와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높인다. 동시에 철수 이후의 불안정과 미군 피해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양당 모두가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7] 따라서 이란 전쟁 종식을 향한 국내적 압력이 커지더라도

5) AP, “How Trump and Republicans lost the 2026 midterm elections, according to The AP Voter Poll,” (4 Nov 2026).
6) 하경석, “美 중간선거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연속,” 『INSS 전략보고』, No. 412, 국가안보전략연구원 (Oct 2026).

긴장 완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속도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에너지 공급과 해상교통로의 위험에 더하여, 중동에 투입된 미국의 군사력과 정치적 관심이 한반도 및 인도 태평양의 억제태세에 미치는 영향에도 대비해야 한다.

대중국 전략에서도 군사적 억제와 선택적 타협이 병행되는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2026년 국방전략(NDS)은 중국 억제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으나,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비민감 상품의 관세 우대와 농업시장 접근, 핵심광물 공급 등을 논의하는 등 강대국 정치의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물가 부담과 대통령의 성과 추구는 경제협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의회와 안보관련 부처들은 핵심기술 및 군사 경쟁의 관점에서 대중국 전략을 평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미중 관계의 조정이 한미 간 역할 분담 및 한국의 산업적 이해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백악관이 확인한 바, 11월 선전 APEC 계기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8] 핵군비와 이란 문제에 관한 강대국 간 협의는 긴장 완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반면 동시에 지역 현안의 당사국이나 동맹국의 이해가 배제된 채 중요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포괄적 타협의 성사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동맹을 통한 억제의 기반을 강화하면서, 강대국 간 협의에서도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위한 한국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7) Richard Fontaine, “National Security Agenda in the New Congress: A 10 Item To-Do List,” CNAS Insights (6 Nov 2026).

8) BBC, “Trump, Putin, and Xi plan historic joint meeting in China next week, White House says” (13 Nov 2026).

한미동맹의 안정요인과 도전요인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적 변화는 한미동맹에 안정요인과 새로운 부담요인을 동시에 제기한다. 의회의 초당적 동맹 지지는 주한미군 태세의 급격한 조정을 견제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재정 부담과 해외 개입의 비용을 줄이려는 요구는 동맹국의 책임 확대에 대한 압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26 국방전략은 한국의 대북 억제에 있어 “일차적 책임 확대”와 미국의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된 지원”을 함께 명시하였다. 미국의 지원을 어느 분야에 집중하고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동맹 현대화 논의와 더불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 내 동맹 지지의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면서 한반도 방위와 지역적 역할을 연계하는 동맹의 미래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 협력, 대미 투자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현안은 한국의 방위 책임과 산업적 기여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내에서는 연합방위의 효과와 비확산, 자국 산업에 대한 이익을 기준으로 검토되는 과제이다. 백악관이 한국의 기여를 조기에 가시화하려 하더라도 의회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별도의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에 2025년 한미 공동 팩트시트(JFS) 등 정상 간 합의의 전략적 가치는 한국의 기여 확대가 어떠한 안보·산업적 성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책임 확대와 필요한 능력의 확보, 동맹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가 함께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의 상호성을 높이는 것이 미 의회의 입장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북미대화의 가능성 역시 트럼프의 정치적 필요와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계기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내비쳤으나,[9] 트럼프의 외교적 성과 추구가 대화의 유인을 높이더라도 북한의 협상 참여와 조건의 조율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대화의 기회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위협을 낮추되,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감소와 한국에 대한 위협 감소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미 간 목표를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 비핵화 목표와 확장억제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대화 촉진과 협상 의제에 대한 실질적 관여를 함께 추진할 때 한국의 외교적 역할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함의와 대응 방향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정치적 변화는 한국이 한미동맹과 지역 외교를 하나의 국가안보전략으로 연결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내 제도적 견제와 대통령 중심 외교의 변동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 생존 기반을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우선순위로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억제력과 위기 대응 능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한국이 원하는 협력의 방향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협상의 목적과 국익의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역량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 한국의 방위 역량과 산업·기술의 강점을 공동의 안보 수요와 연결하고, 그 성과가 한국의 역량 축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의회 내 초당적 지지, 주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이러한 관계를 지속시키는

9) 『연합뉴스』, “트럼프 "중국서 김정은 만날 수도…김정은 방중 시진핑에 달려"(종합)” (2026. 11. 17).

기반이 될 수 있다.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실질적인 협력의 유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변화를 넘어서는 동맹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질서의 안정과 협력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 억제와 위기 대응의 신뢰를 높이고, 한중일 대화 및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오판과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호주·유럽·아세안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경제안보와 국제규범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 기반 강화는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고 대미 협상력을 뒷받침하는 자산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전략의 국내적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북핵과 동맹, 경제안보를 둘러싼 입장 차이 속에서도 국가가 지켜야 할 목표와 감당할 책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공통분모를 넓혀야 한다. 미국 정치의 진영 구도를 국내 외교 논쟁에 투영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적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 정부의 전략적 판단과 국민적 동의를 연결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트럼프 2기 후반의 미국이 맞이할 정치적 격랑 속에서 한국은 국익에 기초한 외교의 중심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 내 정치 변화가 제공하는 기회와 제약을 정확히 평가하고, 동맹 현대화와 지역 안정에 관한 한국의 구상을 제시하여 필요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국내적 지지와 실질적 역량으로 뒷받침할 때 한국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외교적 주도성 확대를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